

“

새누리당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당은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선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입니다.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정부와 함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책도 만들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조국근대화의 주역으로 일해 온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애국심을 발휘해 연금 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

2014 정기국회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교섭단체 대표연설 中



www.saenuriparty.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한양빌딩
Tel. 02-3786-3000

공무원연금 개혁

지금 못하면 미래세대가 원망합니다

그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 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주시고,
개혁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 2015 예산안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中—



공무원연금법 개혁, 왜 지금 반드시 해야 하는가?



1995년에도 2000년에도 2009년에도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20년전부터 고치려 했던 공무원연금을 아직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정부에 미루었고, 정치는 뒤로 숨었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음 정부에 미루지 않겠습니다.
지금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원망할 것입니다.

싫어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의 3대 문제점



1 재정적자를 더는 감당 할 수 없습니다.

- 60년 공무원연금제도 도입 당시와 지금의 평균수명과 수급자 수는 크게 변화 되었습니다.
 - 평균수명은 '60년 52세에서 '12년 81세로 29세가 증가하였으며, 수급자 수는 '90년 2.5만명에서 '13년 36.3만명으로 14.5배 증가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미 과거 13년('01~'13년)동안 12조원의 공무원연금 적자를 세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 공무원연금 적자는 ▲현정부 15조원 ▲차기정부 33조 ▲차차기정부 53조원 등 시간이 흐를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80년까지는 1,278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80년까지는 1,278조원의 적자를 보전하여야 하므로, '16년 출생아의 경우 '80년까지 2,495만원, 연간 38만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상위직급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과의 연금 차이가 너무 큼니다.

-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으며, 기준소득상한이 804만원으로 국민연금 407만원보다 2배 가량 높아 고액 연금 수령자와 6급이하 공무원과의 연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3 국민연금과의 격차가 커도 너무 큼니다.

- 공무원연금의 경우 낸 돈의 2.4배를 받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낸 돈의 1.6배를 받습니다.
- '13년 기준 평균 연금월액의 경우 공무원연금은 219만원, 국민연금은 32만원으로 차이가 매우 큼니다.

공무원연금 이렇게 개혁됩니다



- 1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의 기조 속에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국가 재정적자를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2 대다수를 차지하는 실무직(6급 이하)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 관리직(5급 이상) 공무원이 고통을 더 부담하는 하후상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최초로 도입하겠습니다.
- 3 국민연금을 받는 일반 국민들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6년 이후 신규 임용 공무원부터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연금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2031년부터는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65세로 늦추겠습니다.

재직 공무원, 신규 공무원, 퇴직 공무원연금, 이렇게 바뀝니다

W 현재재직공무원들이 낸 돈의 2.4배를 받는 구조를 조정하겠습니다.

- 개혁 이전 가입기간 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되, 개혁 이후 가입기간 분은 더 이상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합니다.
 - 공무원이 내는 돈 “월 소득액 × 공무원기여율” 중 공무원기여율을 현행 7%에서 향후 3년간 10%까지 인상합니다.
 - 공무원이 받는 돈은 국민연금과 유사한 소득재분배 시스템을 도입한 “ $(0.5 \times A값 + 0.5 \times B값) \times 재직연수 \times 연금 지급률$ ”으로 하며, 이 중 연금지급률을 현행 1.9%에서 향후 10년간 1.25%까지 인하합니다.
- ※ A값: 최근 3년 전공무원 평균소득 B값: 공무원 개인 소재직기간 평균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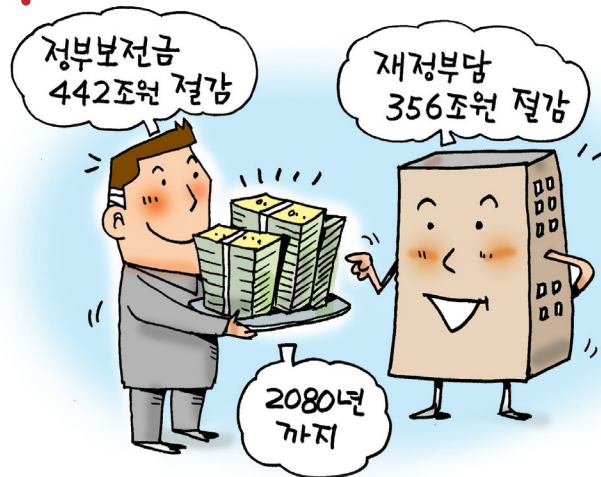
W 2016년 신규공무원부터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겠습니다.


- 공무원이 내는 돈 “월 소득액 × 공무원기여율” 중 공무원기여율을 현행 7%에서 '16년부터 4.5%로 인하합니다.
- 공무원이 받는 돈은 국민연금과 유사한 소득재분배 시스템을 도입한 “ $(0.5 \times A값 + 0.5 \times B값) \times 재직연수 \times 연금 지급률$ ”으로 하며, 이 중 연금지급률을 현행 1.9%에서 국민연금과 동일한 스케줄로 '28년까지 1.0%로 인하합니다.
- ※ A값: 최근 3년 전공무원 평균소득 B값: 공무원 개인 소재직기간 평균소득
- 재직공무원과 동일한 형태로 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W 퇴직공무원들도 개혁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금액 인상률 계산 시 소비자물가지수에 부양률을 반영하여, 물가보다 낮게 연금액을 인상합니다. 또한 평균연금액의 2배 이상을 수급하는 고액연금자는 10년간('16~'25년) 연금액을 동결합니다.
- 재정안정화기여금을 연금액 수준에 따라 2%, 3%, 4%로 차등 적용하여 하후상박 구조를 도입합니다.
- 연금수급자가 정부가 전액 출연하는 공공기관에 재취업하거나 선출직으로 당선될 경우 재임기간 동안은 연금지급을 전액 정지합니다.

재정 절감 효과는 얼마나 될까?



 (정부보전금)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80년까지 1,278조원의 적자보전금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새누리당 개혁안에 따르면 '80년까지 442조원(35%)의 보전금을 절감합니다.

- '16년 출생아 1명당 '80년까지 863만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부적으로는 현 정부('16~'17년)에서 4.2조원(52.5%), 차기 정부('18~'22년)에서 20.3조원(61.5%), 차차기 정부('23~'27년)에서 23.3조원(44.0%)의 보전금이 절감됩니다.
- 현 정부에서 차차기 정부('16~'27년)까지 1인당 세금부담을 93만원 줄일 수 있습니다.

 (총 재정부담금)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80년까지 공무원 퇴직으로 인해 정부가 부담하는 총 재정부담이 2,037조원 발생하지만, 새누리당 개혁안에 따르면 '80년까지 356조원(17.5%)의 총 재정부담이 절감됩니다.

- 세부적으로는 현 정부('16~'17년)에서 6.3조원(31.0%), 차기 정부('18~'22년)에서 19.8조원(30.8%), 차차기 정부('23~'27년)에서 21.3조원(24.6%)의 총 재정부담이 절감됩니다.

※ 총 재정부담금은 '연금부담금+보전금+퇴직금'입니다.

평균 공무원 기준, 연금액은 줄어드나 퇴직수당은 늘어납니다

[평균 공무원] : '98년 9급으로 처음 임용되어
현재 7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만42세의 공무원으로 함.

- 평균 공무원 1인 기준, 내는 돈(기여금)이 17% 늘어나고, 받는 돈(연금총액)은 15% 감소하지만, 퇴직수당을 인상하기 때문에 퇴직 이후 받는 총 금액(연금총액+퇴직수당)은 10% 감소하게 됩니다.
- 월 연금액은 179만원에서 162만원으로 감소하나, 퇴직수당은 4,733만원에서 6,553만원으로 증가합니다.

6급 이하 공무원과 5급 이상 공무원의 차이는 얼마나 줄어들까?

- 국민연금과 같은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과 기준소득 상한의 인하 등으로, '06년 임용된 5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의 연금액 차이가 현재보다 51% 감소하게 됩니다.
- 한 달 연금액 차이가 현행 기준 87만원이지만, 개혁 후 43만원으로 줄어듭니다.

